

‘대기오염 무단 배출 논란’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종결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논란을 빚었던 광양제철소에 대해 행정처분 종결과 함께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

문제에 대해 그간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고로 브리더 개방, 폭발 예방위한 불가피한 조치”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 지속적 관리 강화”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2월 26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고로)에 설치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환경

일종인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그해 6월 18일 청문을 실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 개방’을 국가적 환경문제로 간주하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민관협의체는 6차례 회의와 해외 선진사례 시찰을 통해 불투명도 기준 설정과 공정개선, 기술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 1997년 허가된 ‘로내 이상공정 발생시 브리더(가지배출관) 이용’에 대한 법리해석 결과 ‘휴풍(고로설비 수리를 위해 열풍주입을 중지하는 작업)’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말 광양환경단지에 포스코 개선방안과 투자계획 등의 설명과 광양시민 보고회를 완료하고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했다.

박현식 동부본부장은 “향후 광양제철소 대기 오염 문제는 환경부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기 큰손’ 장영자

2심도 징역4년 선고

“심리 오래했지만 모두 유죄”

1980년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대의 어음사기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최근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년의 큰손 장영자씨(76·여)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6일 오후 2시께 사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혹시나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를 했다”며 “결심 공판기일 이후 다시 한번 기록을 살펴봤으나 피고인의 사기, 유가증권 등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씨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1심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사기 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인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 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기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를 해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4일 사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장씨와 협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씨는 1983년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원대 어음사를 저질러 당시 법정 최고 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년 뒤인 1994년에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8년 광복절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회체 사기 사건으로 3번째 구속, 2015년 1월 출소했다.

● 단신 ●

‘노래방 성추행’ 의혹 광주 기초의원 불기소 송치

광주 광산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여성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 지역 기초의원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일행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여수 해상서 4명 탄 어선 좌초…모두 구조

여수 해상에서 7톤급 잠수기 어선이 암초에 좌초됐으나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승선원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6일 오전 6시20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초삽도 서쪽에서 7.93톤급 잠수기 어선 K호(승선원 4명)가 항해 중 좌초됐다는 신장 A씨(64)의 구조요청이 여수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좌초된 K호가 약 50도 가량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확인하고 K호 승선원 4명을 구조정에 옮겨태웠다.

또 더 이상 선박이 표류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육지에 고박작업을 실시하고, 물이 차오르는 만조시에 맞춰 선박을 인양해 여수의 조선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선장과 선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암서 주택 화재로 50대 여성 숨져

6일 오전 2시7분쯤 영암군 영암읍의 한 주택 1층 거실에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23분 만에 꺼졌다.

주택 내부 약 60㎡가 탔고, 1층에서 A씨(59·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가족의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서 벌목작업 70대 나무에 깔려 사망

5일 오후 3시17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70)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얼굴과 가슴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야산에서 벌목을 하던 중 나무에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함평서 염소 고기 먹은 80대 숨져..부검 의뢰

염소 고기를 먹은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5일 전남 함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3분쯤 전남 함평군의 한 마을에서 A씨(80)가 염소 고기를 먹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고기를 먹던 중 기도가 막힌 것은 아닌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 남구, 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직 직원 고발

갑질 논란 조사 과정서 500만원 부당 수령 정황 확인

‘갑질 논란’이 제기된 광주 남구 공무직 직원이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말부터 공무직 직원 A씨의 갑질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계약직 직원 8명의 근무수당 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호남신문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